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李景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지역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동향』,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역곡동 300-4
TEL : (02) 3460-1001,1114 / FAX : (02) 3460-1122,1199
URL: <http://www.kiep.go.kr>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李景台

원고를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왕윤종, 최낙균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목 차

- 1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 발전모형 비판의 한계 · 5
- 2 동아시아 발전모형과 외환위기 · 18
 - 1. 동아시아 모형의 특징 · 22
 - 2. 동아시아 모형과 구조적 취약성 · 29
 - 3. 구조적 취약성과 외환위기 · 34
 - 4.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개혁지연효과 · 37
- 3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진로 · 40
 -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



1

신고전학파의 동아시아 발전모형 비판의 한계

1997년 7월 태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로 번지고 이어서 한국을 강타하였다.

한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에 급속한 공업화를 통해서 고속성장을 이룩한 제1세대 신흥공업국이고,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그 뒤를 이어서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고 있던 제2세대 신흥공업국이었다.

외환위기 발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들 국가들은 경제모범생으로서 많은 사람들로 부터 칭찬을 받아왔으며, 서방의 정부관리들과 학자는 물론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도 긍정적인 평가에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¹⁾

긍정적인 평가자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동아시아국가의 시장우호

1) 물론 폴 크루만 교수가 1994년 *Foreign Affairs*의 기고를 통해서 아시아 경제기적의 허구성을 지적하였지만 이는 결코 다수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었다.

적인 경제개발전략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건전한 거시정책운용, 수출지향적 대외개방정책, 기업가정신의 권장, 사적이윤추구의 제도적 보장, 외국자본(차관자금 포함)의 적극적 유치로 특징지어지는 올바른 방향의 개발전략은 이들 국가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순기능적 요소들, 즉 높은 저축률과 교육수준, 근면성과 결합하여 눈부신 경제성과를 이룩하였다는 것이다.

위의 부류에 속하는 학자들은 통상 신고전주의자 또는 정통학파로 불리우는데 이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하였다. 수입규제를 통한 국내시장보호, 인위적인 저금리정책과 신용할당 등의 금융억압, 조세감면을 통한 투자촉진, 특정전략산업의 집중육성 등 이른바 산업정책이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진 정부개입은 동아시아국가의 경제발전을 돕기는 커녕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실령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단순히 한계적 기여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종전의 찬사는 일거에 매도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관들과 많은 서양 경제학자들은 외환위기가 일시적 유동성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경제구조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규제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이라고 강조하였다.²⁾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종전의 찬사는 일거에 매도와 비난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외환위기 전과 후의 상반된 평가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한 손에는 보호와 지원이라는 당근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규제와 간섭이라는 채찍을 든 채 민간을 지도해 나가는 관치경제하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확립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경쟁의 틀을 구성하는 제도구축을 하지 않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정경유착과 독과점을 통한 지대추구에 열중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시장적, 반경쟁적 구조와 행태는 기업 부실과 금융부실을 심화시켜서 급기야는 태국 바트화 몰락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외환위기 전과 후의 상반된 평가는 논리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전에 신고전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정부개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시장원리에 충실하였고, 설령 개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친화적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이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고 찬양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부개입 때문에 시장원리가 철저히 훼손된 것이 위

2) MIT 대학의 돈부시(*Business Week*, 1997. 8), IMF 부총재인 스탠리 피셔(*Foreign Affairs*, 1998. 5), MIT대학의 폴 크루그만(*Fortune*, 1998), 버클리 대학의 제프리 프랭클("The Asian Model,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nd," 1998. 4) 등.

기를 불러왔다고 비난하였다.

다시 말해서 외환위기 이전의 입장은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본이 건실하였기 때문에 경제기적을 이루었고 둘째 산업정책적인 정부개입이 있었지만 경제기본을 훼손할 정도의 부정적 영향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의 입장은 첫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본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둘째 산업정책적인 정부개입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강력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경제기본을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왜 이와 같은 자가당착적이고 모순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 해답인즉 그들이 대학에서 경제원론을 배울 때부터 시작해서 직업적 경제학자로 발전해 나가는 전과정에 걸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신고전주의사상에 기초한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사상과 정책을 이해하거나 수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들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한국, 아세안(ASEAN) 국가들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높은 경제성장이 병행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당혹감에 빠졌다. 그들이 이해하는 경제학의 세계에서는 오직 시장가격기구만이 궁극적인 경제효율을 보장하는 장치였으며, 정부개입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정부실패를 초래하여 경제효율을 떨어뜨릴 뿐이었다.³⁾

3) 독과점 규제, 기술개발지원, 사회간접투자 등이 약간의 예외에 속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 원인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들은 태생적으로 정부개입의 순기능을 인정할 수 없었으며, 자유경쟁적·시장지향적 정책과 양호한 경제기본에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기도 하였다.

경제개발정책에 관한 신고전주의자들의 견해를 집약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이다. 워싱턴합의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은행보고서는 동아시아 기적은 거시경제안정, 높은 저축과 투자, 강한 교육열과 양질의 노동력, 사회불균형의 완화 등 경제의 기본이 충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특정산업육성, 수입규제, 수출보조 등의 직접적이고 명백한 정부개입은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평가하였다.⁴⁾

이 보고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는 새로운 여건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개입적 개발전략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신고전주의자들이 주장의 일관성을 존중하고자 하였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본을 부정하지 않았어야 했다. 견실한 경제기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위기의 주범으로서 구조적 결함을 지목하

4) 이러한 견해의 집대성이 1993년에 세계은행에서 출간된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이다.

신고전주의자들이 주장의 일관성을 존중하고자 하였다면, 외환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본을 부정하지 않아야 했다. 견실한 경제기본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였을까? 몇 가지 추정이 가능하다.

첫째, 위기 이전의 동아시아 기적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가 오류였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한 결과로 보는 것이다. 즉 동아시아 경제는 외환위기 이전부터 경제기본이 취약하였고 위기의 원인을 배태하고 있었으며 위기의 도래는 다만 시기문제였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들은 동아시아 기적을 설명하는 다른 변수를 찾아내어야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된다.

숙제에 대한 한 가지 해답은 정부개입의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심각한 시장실패 내지는 시장부재의 상황에서는 절제된 정부개입이 고율의 지속적 성장을 낳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해답은 신고전주의자들의 자유주의적 경제관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또 다른 해답은 동아시아 기적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일과성(一過性) 업적이라고 치부하는 것이다. 크루그만 교수의 주장처럼 동아시아 기적은 자본과 노동투입의 결과일 뿐 생산성 향상을 수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은 것처럼 언젠가는 붕괴될 운명에 처해 있었다고 폄하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예컨대 인위적 저금리, 신용할당, 국내시장보호, 독과점

허용 등-이 팔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며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크루그만은 심지어 동아시아를 (구)소련 등의 사회주의 경제에 비유하면서 (구)소련이 초기단계에서 고도성장을 보이다가 마침내는 몰락한 것처럼 동아시아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의 격랑에서 좌초하게 되자, 크루그만의 동아시아 몰락론은 설득력을 얻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초 예상보다도 더욱 빠른 속도로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크루그만의 주장은 지나친 과장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물론 크루그만을 비롯한 신고전주의자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시장주도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하였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강변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시스템의 전환이 불과 2~3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스템 전환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수긍하기 어렵다.

신고전주의자들이 외환위기 이후에 그들의 태도를 바꾸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기분을 부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추정컨대 동아시아 발전모형을 차체에 순치(馴治)하여 보겠다는 의도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숨어 있다는 점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경제적으로 일본이 미국을 맹렬히 추격하

고 뒤이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의 4마리 용을 선두로 하는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추격이 본격화하게 되자 미국내에서는 아시아 경제론 내지는 아시아 경제론이 대두되었다.⁵⁾

1970년대 이후 일본의 자동차, 철강, 가전제품이 물밀듯이 미국 시장을 잠식하면서 미국 동북부의 전통공업지대에서는 심각한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본에 뒤이어 한국도 조선, 철강, 가전제품, 반도체, 자동차의 대미수출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 모두 대미무역에서 큰 규모의 지속적 흑자를 기록하였다.

무역불균형의 초기에는 그 원인규명에 있어서 시장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시장책임론은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리카르도류의 비교우위변화, 또는 헉셔-오린류의 부존요소 변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 미국의 특정산업이 수입품에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것이며, 이는 국제무역에서 자연발생적인 현상이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책임론의 입장에 설 때 무역불균형에 대한 대응은 피해산업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취해지는 다자간 섬유협정, 철강

5) 대표적으로 버클리 대학의 로라 타이슨 교수가 쓴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가 있다. 그 핵심내용은 미국이 첨단기술산업에서 일본의 추격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정부개입(Cautious Activism)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책임론과 미국책
입론은 후퇴하고 경쟁국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및 자동차 등에 대한 수출자율규제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미국책임론은 무역불균형을 비교우위변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보지 않고 미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낮은 저축률, 레이건 행정부의 고금리와 강한 달러 등의 정책실패, 생산성향상의 부진, 미국제조업의 혁신 미흡 등이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무역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책임론의 입장에 설 때의 대응은 두말할 나위 없이 미국 자신의 자구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막대한 재정적자-고금리-달러화 강세-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정책적 오류, 미국기업들의 관료화에서 초래되는 생산성의 저하는 미국내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이었다.⁶⁾

그러나 미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서 시장책임론과 미국책임론은 후퇴하고 경쟁국책임론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일본, 한국 등은 정부가 수출산업에 대해서 직·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미국상품의 수입을 규제하며, 자국기업의 독과점을 조장 내지는 허용하는 등 불공정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국산

6)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자기반성은 1989년 MIT에서 출간된 *Made in America*에서 설득력있게 이루어졌다. 일본기업을 벤치마킹하면서 미국기업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업을 불리한 지위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경쟁국책임론의 입장에 서게 될 때 미국이 가지는 선택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미국도 경쟁국의 정책을 모방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국의 정책을 공격해서 교정시키는 것이다.

전자는 일부 학자들과 기업인, 노조 등이 주장하였다. 암스텐, 웨이드, 타이슨 교수 등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산업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국도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나가야만 일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자유주의사상이 팽배하고 있던 미국 사회에서 수용되기 어려웠다. 신고전파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경제 학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용인하기 어려운 소수의견일 뿐이었으며, 다수 기업인들도 정부의 간섭을 싫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미국은 자국경제의 어려움이 경쟁국들의 공정하지 못한 정부지원과 수입규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경쟁국들의 산업정책은 물론 기업관행까지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미·일 구조조정협약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미국의 동아시아 견제의 표출이다. 미·일 구조조정협약에서 미국은 일본의 수입규제는 물론이거니와 느슨한 독과점규제, 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의

7) 타이슨 교수의 전개서, 엘리스 암스텐 MIT대학교수의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로버트 웨이드 Princeton대학교수의 "Governing the Market" 등.

수직계열화, 주거래은행제도, 대리점중심의 유통관행,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에 대한 보조금지급 등을 불공정무역의 유형으로 지목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는 금지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수출보조금은 물론이고 특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정부의 재정적·금융적 지원도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미국은 협상 초기에는 상업적 이용과 연결되는 기술개발지원도 금지시킨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오히려 자국에 불리하다는 점을 깨닫고 입장을 바꾸었다.⁸⁾

미국이 주도해서 특정산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시킨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

후생경제학은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기구에 자원배분을 일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불완전경쟁시장에서는 정부가 자원배분에 개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왔다. 만약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이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이는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 아니다.⁹⁾

8) 미국은 일본과 비교할 때, 기초기술의 발명은 월등하였으나 이를 응용해서 제품을 개발하는 기술이 뒤떨어졌는데 만약에 상업적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금지하면 이는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9) 완전경쟁모형하에서도 수입대체산업에 보조금을 주면 결국 관세부와 효과와 같은 결과를 가져와서 상대교역국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의 교역조건을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동아시아 국가들의 시장이 불완전하다면 정부보조금은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투자사업의 위험성을 판독하고 분산시킬 수 없다면 위험성이 높은 대규모투자사업에서 과소투자가 일어날 것인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할당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 금융시장의 낙후성이 경제발전의 가장 심각한 애로였다는 점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상품과 직접 경쟁하는 미국기업들은 동아시아 정부의 보조금지급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미국정부에 보조금지급을 금지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논거로서 평평한 운동장(level playing field)론을 채택한다.

그런데 개별적인 보조금만을 따로 떼어서 보면 운동장을 동아시아 쪽으로 기울게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여건을 고려하면 원래 미국 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는 균형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다. 금융-자본시장의 미발달, 근대적 기업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 초기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유경쟁을 시킨다면 이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경쟁이 된다.

미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견제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다. IMF 구제금융조건을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을 해체하고 신자유주의체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다. 미국기업의 입장에

금융-자본시장의 미발달, 근대적 기업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 초기여건이 불리한 상황에서 동일한 출발선에서 자유경쟁을 시킨다면 이는 다른 형태의 불공정경쟁이 된다.

서 보면, 차제에 동아시아 경제체제를 미국체제에 수렴시키고 조화시키면 자신들의 글로벌 경영활동이 더욱 수월해지고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진출이 용이해지며 체제 차이에서 연유하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줄어든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자들이 동아시아 경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충실한 경제기본을 높이 평가하다가 위기 이후에는 경제기본을 전면 부정하는 태도는 논리적 일관성이 전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2

동아시아 발전모형과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요약하면 결국은 내부요인설과 외부충격설로 집약된다. 내부요인설은 당사국의 구조적 취약성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외부충격설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인근 국가로부터의 전염효과 때문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두 가지 주장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양쪽 모두 다른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다.

외부충격설은 원인제공자로서 국제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떼거리 행동(herd behavior)을 지목하지만, 어떤 이유로 동아시아 국가들중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와 겪지 않은 국가들이 병존하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실제로는 대만과 홍콩도 국제투기자본의 공격을 받았으나, 환율정책의 적절한 운용과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의 이유로 외환위기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는 결국 국제투기자본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내부요인설과 외부충격설
은 상호 배타적이지만 양쪽 모두 다른 주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지는 않다.**

의 공격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국가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내부요인설은 위기당사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논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현실세계에서 모든 경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구조적 요인이 외환위기로 연결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내부요인설은 결과론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위기발생국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문제점들을 사후적으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과거 중남미와 북구에서 발생하였던 외환위기는 과도한 정부재정적자, 경상수지적자 등이 그 원인이었으나 금번의 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는 종전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아시아의 위기국가들은 재정수지, 경상수지, 물가, 성장률 등의 거시지표가 심각하게 나쁘지는 않았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에 등장한 제3세대 외환위기모형, 자본계정 위기모형 등은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가진다. 단기외환차입과 장기국내대출간의 기간불일치, 달러화표시차입과 국내통화표시대출간의 통화불

일치 때문에 예상치 않은 대규모 외환유출사태 앞에서 위기는 불가피하였다는 설명은 일응 납득이 가지만, 외환위기가 금융위기 및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대되어간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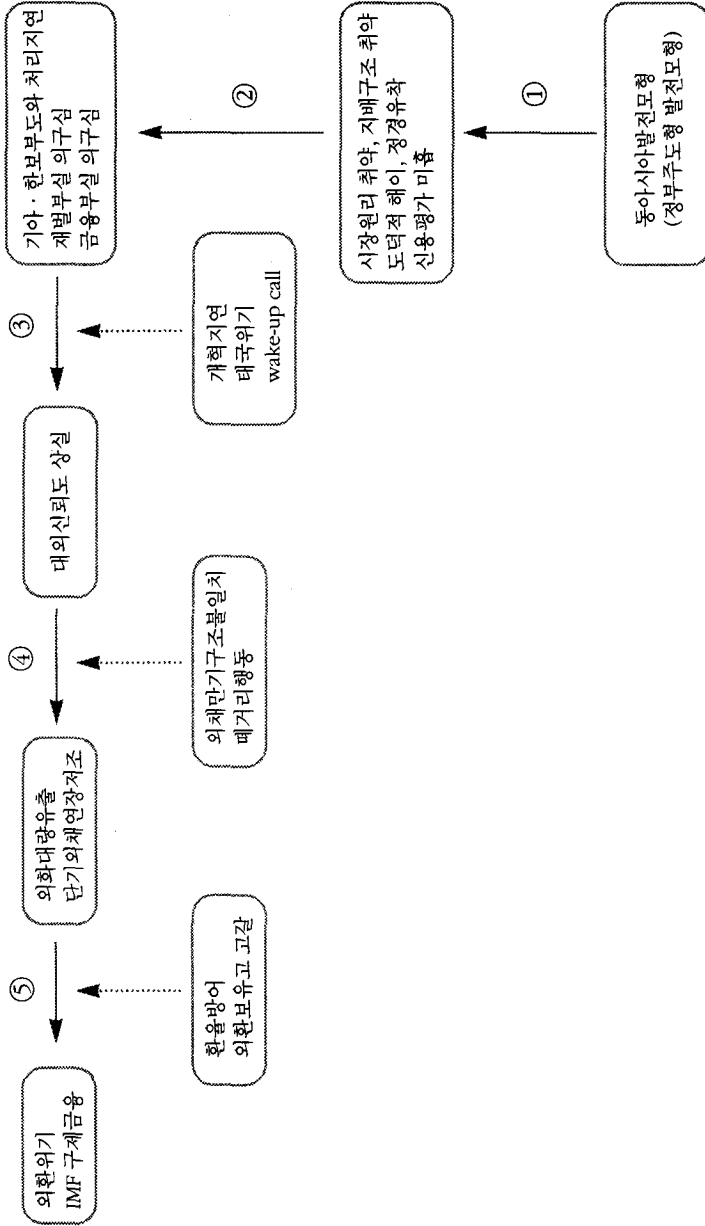
내부요인설 중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을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주장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이 필연적으로 구조적 취약성을 배태시켰고, 구조적 취약성은 다시 외환위기를 불러들였다는 이른바 동아시아 모형원죄설이다. 그들은 동아시아 발전모형 → 구조적 취약성 → 외환위기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였다.

동아시아 모형원죄설은 미국의 관리, 정치인, 일부 신고전파 경제학자들과 IMF 강드쉬 전 총재가 주도하였다. 그들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이 외환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에 위기국가들은 IMF프로그램에 따른 개혁을 실시하여 경제운영 패러다임을 신자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우선 동아시아 발전모형 → 구조적 취약성 → 외환위기의 인과관계가 타당한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마치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한국의 위기발생 과정을 거꾸로 재구성해 보기로 한다.

〈그림 1〉에서 보면 동아시아 발전모형이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해서 원죄를 짓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을 채택하는 한 외환위기는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존재이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모형원죄론에 의하면 동아시아 발전모형은 온갖 비효율, 부조리, 낭비의 근원이다. 정부는 규제를 일삼고 기업은 정경유



〈그림 1〉 한국의 외환위기 발생과정 (逆順)

착을 통한 지대추구에 골몰하며, 금융기관 또한 정실주의에 입각한 특혜대출을 자행한다.

그러나 동아시아 외환위기국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을 동아시아 모형에 결부시키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그러한 문제들이 동아시아 국가에만 존재하는가?

설령 동아시아 국가에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동아시아 모형 때문에 생긴 문제들인가? 그러한 문제들과 외환위기 사이에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가? 등이 엄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모형을 채택한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모형이 위기의 원인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마치 까마귀가 날 때 배꽃이 떨어졌다고 해서 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짓는 것과 같다. 배꽃은 바람이 불어서 떨어질 수도 있고 수명이 다 되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1. 동아시아 모형의 특징

동아시아 모형원죄론의 타당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전제로서 먼저 동아시아 모형의 핵심적 특징이 정의되어야 한다.

사실 무엇이 동아시아 발전모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다. 동아시아의 지리적 포괄범위를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세안국가 및 대만, 홍콩으로 설정할 때, 이들 국가간에는 상당한 이질성과 다양성

이 존재한다.

경제적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 강력한 국가개입이 있었으나, 대만, 홍콩은 시장의 역할이 강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그 중간정도의 정부개입이 있었다. 또한 한국, 일본은 강한 민족주의적 기치 아래에서 차관 위주의 외자조달을 하면서 직접투자를 통한 외국기업의 진출은 의도적으로 억제한 반면에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동아시아지역에는 유교, 불교, 기독교, 회교 등의 다양한 종교가 보급되어 있다.

흔히들 동아시아 발전모형과 유교윤리를 결부시키곤 하지만 유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널리 전파되었을 뿐 동남아시아에는 거의 진출하지 못하였다. 동양사학자들에 의하면 한국의 유교는 성리학(주자학)으로서 교조주의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중국, 일본의 유교는 양명학의 영향을 받아서 실용주의적 색채가 짙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질성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선진공업국(일본), 선발신흥공업국(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후발신흥공업국(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들은 고도성장과정에서 몇 가지의 공통점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공통점들이 모여 이른바 동아시아 발전모형을 구성한다.

이 공통점들은 거시적 특징과 미시적 특징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혼용할 경우에는 뒤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과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무엇이 동아시아 발전모형인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 중국, 일본의 동북아시아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의 아세안국가 및 대만, 홍콩 간에는 상당한 이질성과 다양성이 존재한다.

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거시적 특징은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 높은 교육수준, 근면한 근로의식, 수출지향적 경제정책 등이고 미시적 특징은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관계인데 먼저 거시적 특징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거시적 특징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경제성장에 대해서 순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자명하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저축을 많이 하고, 이것이 투자로 연결되며, 교육받은 양질의 노동력이 열심히 일하며, 정부가 대외지향적 경제운용을 한다면 이변이 없는 한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징 자체보다는 왜 동아시아국가에서 이 특징들이 지배적으로 나타났는가가 중요하다.

동아시아국가들에서 관찰되는 높은 저축률과 교육열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각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속에 대한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어려운 작업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육열이 높은 이유는 문화사적으로 볼 때는 조선조 이래 교육과 입신양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회보상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유교적 가치관은 가문의 영예를 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모는 끼니를 굶더라도 자식만은 공부시켜서 출세

시키겠다는 희생정신이 생겨날 수 있었다.

저축의 경우에 동아시아 국민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인들보다도 내핍과 절약의 미덕이 강하다고 볼 확실한 이유가 없다. 오히려 서구인들의 소비행태가 더욱 합리적인 면도 있다. 동아시아에서 저축률이 높은 이유는 교육열이 높은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로서는 낙후한 소비자금융제도를 들 수 있다. 주택은 물론 기타 내구소비재 구입자금에 대한 은행대출과 할부금융이 빈약하였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저축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소비억제적인 정부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특별소비세의 부과, 가계저축에 대한 조세감면 등 소비억제적-저축장려적 시책이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고 내구소비재의 수입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자유화되기 시작하였다.

대외지향적(혹은 수출지향적) 성장은 정부의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이다. 소극적으로는 수입대체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수출노력을 억제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금융 및 조세지원과 비금전적인 의욕고취를 통해서 수출을 적극적으로 우대하였다는 사실이다.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거시적 특징에 주목하는 경우 경제성장과정에서의 정부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좋은 정책을 써서 성장을 촉진하였다기보다는, 실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거시적 특징에 주목하는 경우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정부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장을 휘방놓지는 않았다는 소극적 찬사의 대상이 될 뿐이다.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저축자금을 비생산적 부문에 낭비한다든가, 수입 대체정책을 채택한다든가, 돈을 마구 찍어내어 인플레이를 조장한다든가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을 따르면 동아시아 발전모형은 특수형이 아니라 보편형이다. 다른 나라의 발전모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결이나 묘안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고도성장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미시적 특징은 정부와 기업관계에 있어서 동아시아 국가가 보여준 특수한 형태에 주목한다. 즉 동아시아 정부는 영미식의 시장방관자도 아니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계획자도 아닌 제3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동아시아 경제발전과정에서 정부와 시장간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이른바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이론에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으므로 새삼 되풀이할 필요가 없지만, 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정부개입이 시장순응적이었는가, 아니면 시장 역행적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끄집어내자면 기능상으로는 시장순응적이고 제도상으로는 시장역행적이었다.

동아시아 정부는 정부와 기업관계에 있어서 영미식의 시장방관자도 아니고 사회주의국가의 중앙계획자도 아닌 제3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개발 초기에 심각하게 존재하였던 시장실패—즉 금융시장의 낙후, 국내저축의 부족, 기술의 낙후 등—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자원동원기능, 조정기능, 후원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생산과 투자가 증대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시경제운용과 수출지향정책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비록 정부가 자원배분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에도 자원배분의 왜곡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볼 때 성숙된 시장이 존재하였더라면 시장을 통해서 달성되었을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시장순응적 정부개입이었다.

그런데 동아시아 정부가 이와 같은 자원동원기능, 조정기능, 후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 즉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경제개발의 초기단계에서 광범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주로 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금융정책 부문에서는 중앙은행과 일반상업은행의 권한을 약화시켜 통화공급, 금리결정, 금융자금배분이 정부가 설정한 경제개발목표에 부합되게끔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가안정보다는 성장을

우선하면서 성장통화를 공급하고, 금리를 규제하며, 소비자금융을 억제하면서 전략산업부문에 자금을 집중시켰다.

외환정책부문에서는 엄격한 외환통제, 환율규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목적은 희소한 외환이 전략산업부문에 집중되도록 하고 수출에 유리한 환율수준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정부는 시장경쟁조직에도 개입하였다. 규모의 경제효과를 중시해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 유치산업보호육성의 명분하에 수입을 규제하였으며, 경영권보호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간합병을 억제하였다.

지원, 보호, 규제를 특징으로 하는 정부기업간의 관계는 일련의 법령과 행정조치로 구성되는 경제제도에 의해서 규정되고 집행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조성적이라기보다는 시장억압적으로 작용하였다. 시장조성적 제도는 공정거래제도, 기업지배구조제도, 퇴출제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유도하는 데 반해서, 동아시아국가들의 제도는 시장경쟁을 억압하는 것이었다.

동아시아의 경쟁조직은 다수가 참여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소수 정예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폐쇄형이었다. 누구에게나 시장진입의 기회가 허용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승자가 판가름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장진입자를 결정하고, 진입 이후에는 국내외로부터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었고, 퇴출여부도 정부가 결정하였다.

동아시아의 경쟁조직은 다수가 참여하는 개방형이 아니라 소수정예에게만 특혜가 주어지는 폐쇄형이었다.

2. 동아시아 모형과 구조적 취약성

동아시아 모형의 구조적 취약성이라고 지적되는 점들, 즉 높은 부채비율, 기업지배구조의 미비, 금융건전성의 미흡, 정경유착, 대마불사, 도덕적 해이 등은 동아시아 모형의 특징에서 연유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발전이 일정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가?

경제사적 관점에서 엄밀한 추론을 하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병리현상은 동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에서도 특정기간 동안에 흔히 관찰됨을 알 수 있다. 지금의 서구 선진경제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 있을 때에도 위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지녔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투자기회가 풍부하고 시장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높다. 따라서 투자자금수요는 크지만, 기업의 자기자본축적이 부족하고 주식시장이 낙후되어서 소요자금의 조달은 주로 차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¹⁰⁾

10) 미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자금은 지역은행과 지역기업가들로부터 조달하였고, 대규모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록펠러, 듀폰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전국적 규모의 부유한 자본가와 투자은행들이 사채인수, 직접투자의 방식으로 공급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기업지배구조, 금융건전성 등은 자유방임적인 시장조직내에 당연히 존재한다든가, 또는 시장내에서 자생적으로 생성,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구축해 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에서 노정되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공익성과 사익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산물로 보아야 하는데, 선진국의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진화론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제반제도가 형성되어 왔고 후발국의 경우에는 주로 선진국제도의 모방과 변형을 통해서 이식되었다.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건전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의 축적된 결과가 오늘날의 선진제도인 것이다.

미국에서 기업지배제도는 19세기말~20세기초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계기로 전문경영인들이 주주이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하도록 담보하는 장치로서 발전되어 왔다. 그 이전까지는 미국도 우리와 비슷하게 기업의 주식이 대부분 소수의 지배대주주에 의해서 점유되고 이들이 직접 경영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금융감독과 건전성규제제도 또한 1929년의 대공황을 계기로 금융기관의 파산은 실물경제의 위기로 직결되는 외부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의 산물인 것이다.

정경유착은 어떠한가? 정치권력과 돈의 공생관계는 어느 시대, 어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건전성에서 가장 앞서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200여 년에 걸친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의 축적된 결과가 오늘날의 선진제도인 것이다.

느 국가에서나 존재하였다. 서구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정경유착을 단절시키기 위한 돈 안드는 정치제도의 발전역사라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서구 의회제도발전과정에서 정당의 정치자금조달과 부패구조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오랜 기간에 걸친 선거제도의 개선과 기업투명성의 제고를 통해서 현저히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부패스캔들은 오늘날에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동아시아 국가와 구미 국가간에 존재하는 정경유착의 차이는 정도 차이일 뿐이며 그 차이의 해소는 시간의 문제인 것이다.¹¹⁾

동아시아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혹독한 매도를 당한 부분이 있다면 다름 아닌 도덕적 해이이다. 기업은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여 외형확대에 주력하고 금융기관은 수익성을 무시한 대출을 자행하였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즉 각 경제주체가 행위결정을 할 때 그 결과에 대한 옹분의 책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초래되었으

11) 중세 이탈리아에서는 1550년과 1576년에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선물제공을 금지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W. Little & E. Posada-Carbo ed.(1996), *Political Corruption in Europe and Latin America*, p. 27, Institute of Latin American Studies.

며, 기업과 금융기관의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민간의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떠안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일반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은 경제개발과정에서 모두 현저한 정부개입이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현상이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후 경제성장을 주도한 가공조립제조업은 지대추구가 아니라, 끊임없는 기술개선을 통해서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일본이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개입이 가장 약했던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주택할부금융을 담당하던 주택대부조합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금리규제철폐 이후에 악화되는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한 무리한 대출이었다.

정부개입은 도덕적 해이의 필요조건도 아니고 충분조건도 아니다. 도덕적 해이는 정부개입 이외에도 미래에 대한 정보의 부족과 비대칭적 정보, 장기적 위험보다도 단기적 이윤을 우선하는 태도 등에서 비롯되며, 설령 정부개입이 있다 하더라도 정부의 감독기능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한국정부는 강력한 정부개입을 실시하였다. 특히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은 유망산업선정, 저금리의 신용할당, 사업주체선정 등 전형적인 선택적 산업정책이었다. 그러나 유능한 관료들로 구성된 정부는 사업타당성

심사와 대출금사후관리를 엄격히 하였고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부실기업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질서 있게 정리하였다.

1970년대에 정부주도로 설립된 중화학기업들은 그 이후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지금도 한국수출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오자 한국정부는 금융자유화를 표방하면서 거액여신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사후관리기능을 포기하고 이 기능을 은행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은행들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여기에 더해서 행정부가 아닌 정치권으로부터의 대출압력이 가중되어, 거액편중여신의 폐단이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 발발 이전에 발생하였던 대기업부도사태를 보면, 정부개입의 축소에 의해서 생기는 공백이 시장원리의 작동에 의해서 적절히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구조적 취약성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또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이행하는 속도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는 1970~80년대에 서구, 중남미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고, 미국은 1929년도에 외환위기보다도 훨씬 심각했던 경제위기인 대공황을 경험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동아시아 모

결국 외환위기를 겪은 동아시아국가들의 구조적 취약성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필연적인 결과라기보다는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나 또는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로 이행하는 속도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형을 파기해야 한다면,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였으므로 미국모형인 자본주의를 파기했어야 했고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모형인 복지국가를 파기했어야 했다.

3. 구조적 취약성과 외환위기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은 외환위기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즉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해야 하지만, 구조적 취약성이 반드시 외환위기를 불러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더라도 외환위기를 겪지 않는 국가는 여럿이다. 1980년대에 미국은 거시적으로 막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의 쌍둥이적자, 미시적으로는 중심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와 저축대부조합 부실화 등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하였으나 달러화가 국제기축통화였기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지 않았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거품경제붕괴 이후에 금융부실의 누적, 재

정적자의 확대, 전통산업의 쇠락 등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지만 외환위기의 징후는 없다. 일본은 매년 막대한 규모의 경상흑자를 기록하고 외환보유고도 풍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국유기업과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각하지만 아직도 전면적인 외환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국제자본시장의 떼거리행동(herd behavior)의 전염으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구조적 취약성이 외환위기의 중요한 원인인 경우에도, 이는 사후적 진단일 따름이지, 사전적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이 어느 부문에서 어느 정도 심각해야 외환위기를 초래하는가를 알 수는 없다.

이는 외환위기 설명이론이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달라지는 현실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남미 외환위기는 재정적자, 국제수지적자 등 거시적 불균형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사후적으로 설명되었고, 영국과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의 외환위기는 고평가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외환시장개입이 초래하였다고 설명되었다. 최근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기업부실과 금융부실이 대외신뢰도를 저하시켜 급속한 외화유출이 발생하였다고 설명되고 있는데, <그림 1>에서 보듯이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설명은 국내경제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와 국제금융시스템의 근원적인 불안정성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외환위기를 사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경제문제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외환위기를 사후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설명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경제문제가 외환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이론이 될 수 없다.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경제이론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설명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 또한 별로 유용하지 않다.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거시경제운용,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의 구축, 건전한 금융제도구축, 노동시장의 신축성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적으로 철저히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하는 외환위기의 전염효과, 또는 단기투기자금이동의 돌발성에 의한 위기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총체적으로 강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마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말처럼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할지언정, 정책 수립가에게 경제개혁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는 것이다.

여하튼간에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할수록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는 경제개혁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개혁에는 경제적 비용이 수반된다.

금융부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막대한 공적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개발도상국들의 개발전략을 제약하는 비용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게 유지하려고 할 때, 기업의 자기자본축적이 미약하고 직접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는 개도국에서는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구조적 취약성의 극복은 정책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경제성장에 따른 시장제도와 시장기능의 내생적 발전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4.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개혁지연효과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드러난 주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구조적 취약성이 항상 외환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모형과 외환위기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노정된 구조적 취약성이 근본적으로는 후진성의 표출이라고 할지라도, 동아시아 모형이 구조적 취약성의 제거를 지연시켰다는 주장은 경청할만하다.

이러한 지연효과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하나는 관성 또는 타성현상이고 다른 하나는 유인부족현상이다.

관성현상이란 동아시아 모형이 지난 수십년간 이루어낸 성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효용을 과신 또는 맹신하게 된 나머지, 변화의 요구를 외면하게 되는 현상이다.

1996~97년경에 외환위기의 징후들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었을 때 당사국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구조개혁을 기민하게 실천하지 못하였다. 자신들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올린 빛나는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외채를 갚지 못하는 국가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비판주의자들의 근거 없는 걱정으로 비쳐졌던 것이다.

유인부족현상이란 동아시아 국가에서 수십년간에 걸쳐서 계속된 정부주도개발의 결과, 시장원리발전의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현상을 의미한다. 시장이 담당해야 할 자원배분기능을 정부가 담당하고 그 성과가 양호하였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정부주도성장은 정부규제와 제도구축미비라고 하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장발전을 지연시켰다. 경쟁제한적 정부규제는 그 자체로써 시장기능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정부의존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시장의 자생적인 발전을 저해하였다. 자유공정경쟁시장은 규제완화만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거래, 경영투명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동아시아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동아시아모형에서 연유되었다는 논거가 충분하지 않고, 또한 구조적 취약성이 항상 외환위기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동아시아모형과 외환위기 사이의 인과관계는 확실하지 않다”

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동아시아에서는 시장실패를 근거로 해서 정부개입이 정당화되었는데, 바람직하였던 것은 정부가 시장발전을 궁극적 목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규제완화와 제도구축을 진행해서, 정부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시장실패가 정부개입을 낳고 정부개입이 다시 시장실패를 존속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이다.

3

동아시아 발전모형의 진로 - 타파의 대상인가, 개선의 대상인가? -

지금까지의 논의는 동아시아 발전모형이 외환위기의 주범이 아니라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비록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외환위기의 대내적 원인을 제공하였지만, 그 구조적 취약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으로부터 연유되었는가를 엄밀히 규명하지 않고,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에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팽배하였음이 드러났다.

동아시아 경제에서 관찰되는 구조적 취약성은 후진경제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동아시아에 특유한 병리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그 치유방법을 강구함에 있어서 동아시아 모형의 무조건적 타파를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동아시아 모형이 시대의 흐름속에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며, 그 기본정신과 정책기조 중에서 계승, 발전시킬 것은 무엇이고 버릴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

동아시아 모형의 기본정신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의 추구이다. 동아시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시장경제적이냐, 계획경제적이냐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기여도였다.

해 보아야 한다.

동아시아 모형의 기본정신은 실용주의에 입각한 경제발전의 추구이다. 경제발전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고, 그 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해서 시장경제적인 요소와 계획경제적인 요소를 적절히 혼합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동아시아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시장경제적이냐, 계획경제적이냐가 아니라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기여도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서는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기업이 채택되었다. 여기서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기업의 설립에 대규모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취약한 자본조달능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투자사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유화의 기준은 구(舊)소련권의 공산주의와 서구사회주의 정권이 이념적 이유 때문에 기간산업을 국유화 조치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동기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유화 동기의 차이는 성과의 차이로 나타났는데,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국유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던 반면에, 구(舊)소련권과 서구사회주의의 국유기업들은 대부분 부실기업으로 전락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포항제철을 들 수 있다. 포철은 비록 국가의 소유였으나, 경영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사기업 못지 않은 경영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다.

실용주의에 입각한 실사구시의 정신은, 경제정책이 문제해결위주로 운용되는 바탕을 조성하였다. 경제정책의 옳고 그름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발전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 주력하였다.

동아시아의 실용주의에 바탕을 둔 실사구시의 접근방법은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에서 등소평이 취했던 전략과 유사하다. 등소평은 쥐를 잡는 것이 중요할 뿐 고양이의 색깔이 희고 검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비유를 통해서, 경제발전이 중요할 뿐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를 놓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도 실용주의적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경제개발 초기의 열악한 여건하에서 시장경제가 갖는 힘과 한계를 모두 인식하였다.

이윤동기야말로 경제주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경제행위를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의 낙후, 국내시장의 협소와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등의 시장실패 때문에 정부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정부개입은 명분과 실리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경제발전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다. 따라서 정부개입의 범위는 구체적인 경제성과에 의해서 결정되었을 뿐, 어떠한 이념적 편향도 배제되었다.

실용주의정신은 오늘날의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지 개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개혁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개혁이념 내지는 개혁철학을 놓고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어서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즉 시장원리와 정부개입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와 신자유주의와 사회계약주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를 놓고 정부와 비판세력간, 노조와 경영자간에 첨예한 갈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결의 가닥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은 정부주도하에서 시장주도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거에 완전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국 국민들은 평등선호경향이 강하고 경쟁의 공정성에 대해서 회의적이며, 경쟁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등 시장비친화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경제가 단시일에 뿌리내리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에 시장경제에 필요한 경제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의식과 관행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구조개혁의 목표는 효율성의 제고와 국제경쟁력의 향상이지 개혁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효율성과 국제경쟁력강화에 부합되는 실용적인 개혁방법을 부단히 찾아내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경제개혁이 필요로 하는 리더쉽은 극단적인 시장주의자가 아니고, 시장주의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되, 한국의 현실적 제약도 직시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전략가이다. 구조개혁은 원칙면에서는 일관성과 엄격함이 있어야 되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신축성을 유지하는 것이 실용주의적 접근에 부합하는 것이다.

기업과 금융구조조정의 양대 원칙은 투명성과 건전성을 국제수준으로 제고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근간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어야만 시장참여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경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의 법칙이 확립될 수 있다. 경영건전성 역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요인을 제거해서 제2의 외환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어느 수준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어떠한 속도로 도입할 것인가 하는 범위와 속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국내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용능력, 전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해외투자자들의 평가 등을 고려하는 신축적인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예컨대, 부채비율 200%, BIS비율 8%,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등 구

체적 사안에 있어서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과 신축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 발전모형은 공급능력의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방향을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간기업들에게 정책신뢰성을 부여하였다. 생산기업과 수출기업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경영환경을 최적의 상태에서 유지시키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주리라는 믿음을 가졌었고, 또한 그 믿음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기업가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는 한국 산업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여건은 정부가 생산자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노동자 및 소비자보호, 환경보전, 국민복지지출의 증대, 국제규범의 준수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책목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기업가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한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로 연결되어야만 그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지식정보산업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와 설비투자를 증대시켜야 하며, 정부는 지

식정보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주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인프라는 교육, 연구개발, 노동, 벤처, 지적재산권, 외국인직접투자 등이므로, 이들 인프라구축을 위한 관련정책들은 지식정보사회구축이라는 공통목표를 지향해야 정책신뢰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의 우리 현실을 보면 각각의 개별정책이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조정,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 놓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교육개혁,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노사문제, 외국인직접투자유치 등이 관련이익집단의 논리에 밀려 표류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사회의 구현으로 수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났던 문제해결위주의 실용주의적 사고와 정책목표-수단간의 정합성에 다시 주목하고 이를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 동아시아 발전모형은 그 기본이념과 성격에 있어서는 시장경제를 신봉하면서도 구체적 수단의 채택에서는 상당한 수정과 변형이 가해졌는데, 그 이유는 개별국가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실패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에 서구의 많은 학자들과 국제통화기금은 동아시아 발전모형을 위기의 주범으로 단정하고 완전한 청산을 요구하였으며,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 가능한 성장패도에 재진입하기 위해서는 영미식 자본주의의 제도적 표현인 글로벌스탠더드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아시아 국가에서 나타났던 문제해결위주의 실용주의적 사고와 정책목표-수단간의 정합성에 다시 주목하고 이를 되살릴 필요성이 있다.

외환위기는 기업과 금융의 경영투명성 및 건전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었으며, 동아시아 국가는 이 부문에서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만약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서 경영투명성과 건전성의 중요성을 경시한다거나,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반감 때문에 투명성 및 건전성의 불가결성을 경시한다면 이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동시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지식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 발전모형이 갖는 실용주의적 접근과 경제발전 지향적 정책조화의 장점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동아시아 발전모형은 그 변화의 방향성에 있어서는 보편적 자본주의에 수렴하면서, 동시에 구체적 정책수단의 강구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별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발간자료 목록

■ 정책연구

- | | |
|--|---|
| <p>97-01 미국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p> <p>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p> <p>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p> <p>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p> <p>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p> <p>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 · 李晟鳳</p> <p>97-07 韓 · 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 · 羅秀樺</p> <p>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 李昌在外</p> <p>97-09 東아시아 貿易 · 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p> <p>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p> <p>97-11 韓 · 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p> <p>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p> <p>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濬 外</p> <p>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坡</p> <p>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① / 張亨壽 · 王允鍾</p> <p>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p> <p>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 · 金琮根</p> <p>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p> | <p>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p> <p>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p> <p>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p> <p>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 · 李弘求</p> <p>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外</p> <p>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 · 李炯根</p> <p>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p> <p>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 · 李昌在外 · 朴映坤</p> <p>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p> <p>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 徐錫興</p> <p>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p> <p>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元容杰</p> <p>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敎</p> <p>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濬 · 李性美</p> <p>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p> <p>98-19 中 · 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況과 전망 /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p> <p>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 · 洪翼杓</p> <p>98-21 중국 항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 · 崔義炫</p> <p>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p> <p>99-02 韓 · 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王允鍾·鄭在完·金琮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1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2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2/黃祥仁·王允鍾·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3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4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蔡旭·金準東·安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的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障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金準東·蔡旭·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 協商의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 방안/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煥·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李鍾華
-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宋有哲·朴芝賢

李景台

서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1970)

미국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경제학 박사(1983)

산업연구원 부원장(1995~199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現, E-mail: ktleee@kiep.go.kr)

APEC 경제위원회(EC) 의장(現)

APEC 교육재단 이사장(現)

세계은행 국제연구연합 이사(現)

著書 및 論文

『産業強國에의 길』(1998)

『産業政策의 理論과 現實』(1996)

『우리나라 成長潛在力과 國際競爭力 增大方案』(共著, 1994) 외 다수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발전모형

2001년 10월 10일 인쇄

2001년 10월 15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0021-1

값 2,000원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C	(주간)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회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